상공자원부 탈황정책“ 실종"

정유사와 정부 동상이몽 … 아황산저감 용역 정책반영 미비

정부의 아황산 저감시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탈황정책이 겉돌고 있다.
「대도시 지역 아황산 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 사용 규제고시 개정」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정유사와 정부와의 의견차이로 실질적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처가 마련한「저황유 공급 사용지역 확대방안」이 주관부서인 상공자원부는 물론,정유사와도 의견이 엇갈려 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당초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의뢰한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용역결과 중질유 탈황을 비롯한 배연탈황, 연료전환 등 각종방안의 장·단점이 충분히 검토돼 시책에 적극 반영 되었어야 했는데도 이번 정부의 방안은 현실문제를 도외시 한 것으로 분석돼 정유사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용역결과, 배연탈황시설이 석탄원료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 되는 등 석유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사의 중질유 탈황시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용역 결과가 무의미해 지는 등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는 아황산저감을 위해 고유황 벙커 C유를 저유황으로 낮춰가는 중질유 분해시설의 조기 완공을 이뤄야 하는데도 부대공정설비 과정에서의 정부지원 미비를 들어 조기완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함께 탈황시설 과정에서 법인세 면세혜택 기간의 단기성, 기자제 도입시 정부지원, 시설자금 지원문제 등 투자비에 따른 부담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밀어 붙이기 식의 정부시책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유사는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중질유 탈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알려진 배연탈황쪽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정부시책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황산 가스 저감이 요구되고 있는 곳은 대도시지역으로 석탄중심의 대형 산업기지에 국한된 배연탈황의 한계로 인해 기대 이상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정부와 정유사간 마찰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용역 결과를 통한 명확한 정부입장이 기업에 전달되지 못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배연탈황은 미국, 독일 ,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는 있지만 시설과정에서 300평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대도시 지역에는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유사의 중질유 탈황시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6/13>